**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과 관련된 사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정보를 말한다.

사적 행복 추구권을 가진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신상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존엄과 관련된 사안이다. 오히려 신상공개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므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1번 보충) 신상이 밝혀진다면 미리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된다?**

국민의 본질적인 불안감은 사법적 처벌, 형 집행 후에도 지속되는 범죄자 감시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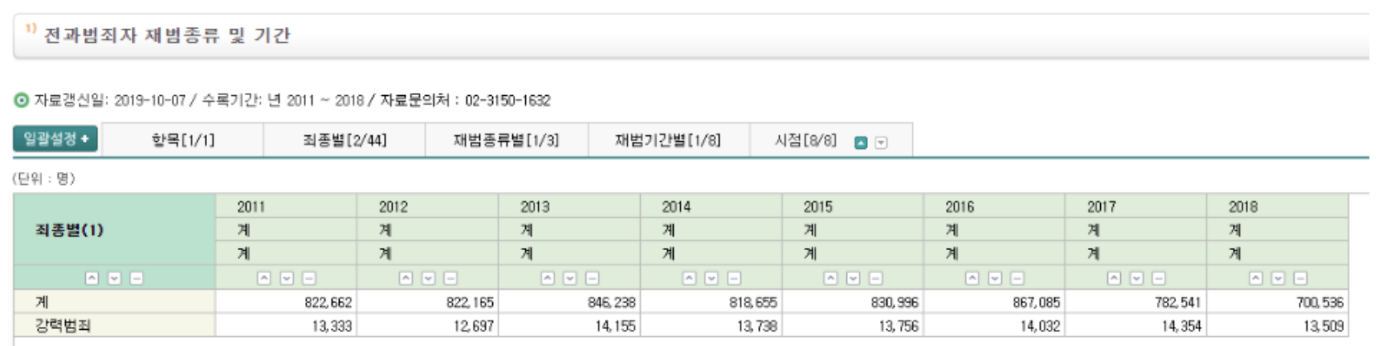
현재의 신상공개만으로는 분노의 감정만을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재범방지, 범죄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의 인격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신상공개로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유사한 제도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2000년과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인 2011년 성범죄자 통계를 비교했을 때, 동종재범자의 비율이 12.6%에서 18.5%로 늘어 특별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재범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강력범죄 재범률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책임에 상응한 형벌 이상의 제재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적개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그들의 존재가 밝혀짐으로써 형 집행 후 사회복귀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인격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기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번 보충) 추가적인 범죄를 밝혀낼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피의사실의 추가적인 입증이나 증거발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으로,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희박한 가능성을 목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이러한 논리로 희박한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한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장기미제사건의 진범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 기관의 몫이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방법을 우선시해야 한다.

**2번 보충)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서 어긋난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 성폭력 범죄 피해는 범죄로 인한 1차 피해에 그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다양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담당자•피해자 보호, 지원체계•언론 등에 의해 2차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주요적인 2차피해는 보복의 두려움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현상이었다.

2차 피해의 책임을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전가시키는 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3. 강력범죄 피의자의 인격권은 경우에 따라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상 공개는 정당하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질서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내용이 기므로 필요에 따라 요약 또는 생략하기)

* **목적의 정당성**

특강법 제8조2에 명시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다. 그러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여 재범률이 줄어들거나 범죄가 예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격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명백하다는 이론적 근거 역시 미비하다.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국가가 범죄예방을 위한 근원적 노력 없이 신상공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100%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앞서 말했듯, 신상공개의 목적인 재범방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할 수 없었다. **불분명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번 보충)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강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구속의 필요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방지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재범방지 및 일반예방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찬성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무죄추정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본질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문제가 될 뿐이다
*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에게 가해질 비난의 시선을 생각하면, 신상 보호는 무죄추정원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59조에 의하면, 공개주의가 적용되는 재판 단계에서도 언론에 의한 재판 공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을 공개하게 되면 피고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단계 이전인 수사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면 재판단계에서 금지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 기관의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자는 현행범과 공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을 최근 **‘형사 사건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는 흉악 범죄자의 사진은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의자 및 주변인에게 가해질 2차 피해>**

* 그러나 초상권은 당사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족의 권리가 아니다.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장은 옳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생활 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신상털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판단 기준 모호>**

‘잔인’한 범행 수단은 어떤 것인지, ‘중대’한 피해는 어떤 피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관인 수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으로 경찰청에서는 2015년 ‘강력범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법의 잔혹성(사체훼손, 장기적출, 토막살인 등), 범행 동기, 흉기 사용 여부, 범행의 치밀성(사전계획, 증거인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아동,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한다. 신상공개의 충분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 범행 자백 여부, 보강증거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즉,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률의 형식이 아닌 경찰청 내부 지침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부 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권리>**

반대 측에서는 범죄자들의 권리를 주요한 근거로 말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가?**

*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신상 공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이 있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은 올해 초 법무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머그샷 배포는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강력범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